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 본격화

김윤덕 의원, 국토부 적극 지원 약속 받아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총괄단장)은 27일 국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및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익산시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김 의원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정현을 익산시 장과의 만남 이후, 국토부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을 수립 중이다.

김 의원은 철도차량기지 이전 간담회에서 "익산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는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철도 운영정책과 효율적인 철도 운영을 위해 이전이 반드시 필요

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가능하다면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에도 포함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현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앞으로 의밀실 익산시, 코데일 KR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과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익산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익산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국토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실에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및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익산시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관리 강화

신영대 의원,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신영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은 정부가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사료검사서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검사 결과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도,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료는 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위해 발생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이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성분이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거나, 동물에게 해로운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스스로 그 사실을 공표하게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안전·품질 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과징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영대 의원은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료를 믿고 급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역특성 맞는 어장이용개발 가능해지나?

이원택 의원, 주민소득 창출 '수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7일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을 위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우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자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에 부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면허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한 지침에 기술받을 수 밖에 없고, 승인 권한 또한 시·도지사에게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한 행사에 어려움이 지역특성 여건에 적합한 어장이용개발이 곤란해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

자침을 폐지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개발 계획의 수립으로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및 자치권한의 회복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주민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국·과장급 부단체장 후보인사 단행

전북도가 내년 1월 3일자 삼반기 국·과장급 및 부단체장 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후보인사는 국장급 8명, 과장급 45명, 부단체장은 4명으로 총 57명이다. > 과장급 후보인사 명단 15명

국장급으로 김미정 자치행정국장,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유희숙 환경녹지국장,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 나혜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병순 의회사무처장 등이 있으며, 부단체장으로 하태욱 남원 부시장, 김광수 김제 부시장, 이태수 임실 부군수, 신병기 순창 부군수 등이 있다. /유호상 기자

다 계획이 있구나?

조지훈 전 경진원장 정책카드 제작 '눈길'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총상진흥원장의 공약을 담은 정책 카드, '지훈이는 다 계획이 있구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모두가 누리는 전주, 잘나가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7가지 공약을 골격으로 장애인 및 청년 정책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더해 정책 카드를 제작했다.

정책 카드는 ▲산업·경제권 ▲도시권 ▲복지·환경·문화권으로 구성됐으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이는 오랫동안 공들여 온 분야별 핵심 정책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는 물론 전주 변화의 시발점이 될 내년 6·1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인 만큼 그 어느 때 선거보다 이를 제대로 검증받고 후보 간 대결 구도 역시 정책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조 전 원장의 평소 지론이기도 하다.

이에 정책이라는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자 제목에서부터 '지훈이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지었으며, 다양한 일러스트를 재미 있게 사용해 시각적 효과를 높임으로써 한층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밀한 소통·현장 행보를 통해 한결 부드러운 조지훈 전 원장의 이미지를 극대화한 캐리커처까지 넣어 보는 재미를 더해 기존의 정책집과는 차별화시켰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답 형식을 통해 정책의 맥을 짚고 이해하기 쉽게 간결한 문장으로 핵심만을 담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현재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책 카드를 본 시민들은 "공약이 사실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렇게 정책 카드를 보니 이번은 다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공을 들인 것 아니겠느냐"며 "전주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다"고 평가했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시민의 삶을 바꿔 잘나가는 전주를 만들고자 전주 시장에 출마한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비전·방향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느냐에 있다"며 "더 많은 시민과 정책을 공유하고 평가받고자 정책 카드를 별도로 제작, 생활 트렌드에 따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현장 행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하며 전주의 비전을 공유, 모두가 누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고 평가받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배후지역에 비산모래 차단 방재숲 조성

새만금청, 예코숲벨트 조성 완료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기대

새만금개발청(청장 안충모)은 새만금 배후지역(부안군 불등마을 등 4개소)의 비산모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코숲벨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사업에 총 37.6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불등마을에서 백련마을을 거쳐 비옥치마을까지 총 3km(13.8ha) 구간에 해송 자귀, 모감주 등 15종 2만5,860본의 나무를 심어 방재숲을 조성했다.

방재숲은 강풍과 비사, 비염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약 70%까지 감소시켜 비산 모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높다.

'예코숲벨트 조성사업'은 드러난 갯벌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려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안군 하서면의 이장단 협의회에서 지난해 2월 건의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선정·추진한 사업



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예코숲벨트가 비산 모래 저감 등의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유진 국제도시과장은 "예코숲벨트가 기존의 해안 숲과 어울려 새만금 배후지역을 친환경 마을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이다"면서 "새만금 사업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0~1세 영아 수당 신규 지원

생애최초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환경방사선량 정보 알림 시스템 등 총 110건 수록

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110건의 제도·시책을 세세, 안전,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별로 구분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했으며, 주요 시책은 인포 그래픽으로 별도 제작해 제공한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4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33건, 문화·체육·관광 2건, 복지·여성·보건 25건, 환경·복지 11건, 건설·교통 7건, 경제·산업 14건, 일반행정·자치경찰 3건이다.

제도·시책별 달라지는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했으며, 핵심 사항을 별도로 요약 구분해 이용 편의를 도왔다.

도는 각 시·군에 책자를 배포해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북도 누리집(www.jonbuk.gokr)에도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부동산 - 생애최초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2023. 12. 31까지), 친환경 및 경형 자동차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2. 31까지), 소방관 지역지원시설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2021년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불법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무허가·불법이용 토지 종합 합산 과세) 등

▲재난안전·소방 - 환경방사선량 정보 알림 개방형 시스템 구축(2개소→3개소), 긴급차량 우선순호 제어시스템 운영, 주거시설 화재피해주민 지원 강화 등

▲농·축·수산·식품 -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읍면지역 실의 사육권 중성화수술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시, 논타작물 생산지원금 지원,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 - 스포츠장 초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장애인스포츠초강지아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등

▲복지·여성·보건 - 0~1세 영아수당 신규 지원(월 3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출생아당 200만 원),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을 안심버스' 운영(5대 운영),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만7세→만8세 미만)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환경·복지 - 기초 환경교육센터 시·군에 신청·지정받아 운영, 투영패턴별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확대,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건설·교통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주소제도 국민참여 확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등

▲경제·산업 - 대학생 공기관 직무턴업 사업 확대 추진, 대기업 갑질 피해사자 금융 지원,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탄소소재 신뢰성 평가센터 개관 등

▲일반행정·자치경찰 -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납부기한 등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스트로깅'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여러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 시책 뿐만 아니라, 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해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귀농귀촌인 농촌 생활역량 강화

농촌사회 주민과 협력이 '열쇠'

전북연구원, '전북형 귀농귀촌교육' 제안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이 정책브리프 '전북도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방향 및 운영 방안(통권53호)'을 발간하고, '영농'을 중심의 귀농귀촌교육에서 탈피해 농촌지역사회에서 주민과의 협력과 상호교류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 역량을 강화하는 전북형 귀농귀촌교육을 제안했다.

귀농귀촌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유사한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동기와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귀농귀촌은 단순히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 삶터, 공동체'인 일상공간의 이주로 개인과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인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농업인'이 아닌 '농촌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 기술, 태도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농귀촌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에 맞게 귀농귀촌교육의 내

용과 교육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연구책임자를 맡은 조원지 박사(산업경제연구부)는 "도시민이 농촌생활에 필요한 태도, 기술, 지식 등 생활역량은 단기간에 체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귀농귀촌교육은 도시민의 농촌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귀농귀촌교육이 도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농촌사회 문화, 생활기술 등을 전달하기보다 농촌 지역사회의 안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상호교류를 통해 생활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체계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귀농귀촌인과 청년들이 농촌 지역사회에서 현장중심의 실용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전북도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귀농귀촌 교육방향, 교육과정 유형,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유호상 기자